

대체복무제 도입 이후, 병역거부자들은 무엇이 달라졌나¹

- 대체복무제도를 통과하며 제기하는 질문들

장길완²

1. 들어가며

“대체복무제도가 생겼음에도 왜 병역거부자들은 더 늘어나지 않은 것일까?” 대체복무제도 개선 활동을 함께 하던 동료가 제기한 질문이었다. 나 역시도 대체복무 시작 이전에는 ‘군대 아니면 감옥’이라는 시대를 지나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제도를 이용하는 병역거부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항상 의문이었다. 병역거부의 ‘상수’로 존재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 평균 약 1000여명 남짓한 전체 수에서 정치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군사화 된 한국사회’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

하지만 제도 자체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익히 알다시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병역거부자는 오로지 교정시설에서 3년간 합숙복무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일관성 있게 정돈된 언어로 활동 이력을 첨부하면서 군사주의를 ‘상식’으로 전제하는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그 이후로도 징벌적인 대체복무를 견뎌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과하는 과정 전반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 평화권과 같은 내용이 ‘권리’로 보장되어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

동시에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며 더 이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이 될 것을 요구 받는다. 군인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이 과정 속에서, 거부자들은 협상하고, 조율하고, 때로는 체념하게 된다. 물론 ‘대체복무요원-되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교정시설마다, 마주치는 교도관마다 물 썰 틈 없이

¹ 이 글은 전쟁없는세상 회원이자 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 및 대체복무제도에 일부 관여하며 활동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여전히 양심을 협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쟁과 군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 전한다. 더불어 전쟁없는세상에서 연재된 <대체복무 표류기>, 민주변론에 필자가 기고한 <“병역과 신념이 조화로운 대체복무” 생활관-?>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일러둔다.

² 전쟁없는세상 회원, 대체복무 중인 병역거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 활동가

일관성 있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체복무요원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 같은 것들이 군대를 거부하고 평화적 실천을 고민하는 병역거부자의 몫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 ‘대체복무요원이 된 병역거부자’가 맞닥뜨린 생활과, 그 속에서 느낀 ‘괜찮지 않음들’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했다. 대체복무제도는 도입 이전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내에서도 ‘뜨거운 이슈’였고, 매년 문제의 해결이 ‘나중’으로 밀리던 이슈였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는 대체복무 도입이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마련을 뒤로 미뤘었다. 그 시간 속에서 기나긴 재판과 형사처벌을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병역거부자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대체복무제도는 그렇게 개인이 삶의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던 시대를 끝내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 누구든지 헌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춧돌이 되어야 했건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20년 10월에 첫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이 드디어 3년의 긴 시간을 끝마치고 소집해제된 현재, 징벌적이고 차별적인 대체복무 현장이 어떻게 하면 인권과 민주적 관점에서 더 나은 제도로 변화될 수 있을지 고민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바란다.

2. “병역과 신념이 조화로운 대체복무 생활관”에서 대체복무요원의 하루 일과³

대체복무요원의 일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복무요원은 소집일에 맞춰 영월⁴에 위치한 대체복무 교육센터로 가야 한다. 교육센터에서는 형집행법, 대체업무 실무와 같은 교육이 3주 동안 진행되고 2-3주 차에 시험을 거쳐 시험 점수, 연고지에 따른 거리 점수, 결혼 유무에 따라 대체복무팀을 운영하고 있는 교정시설에 배치된다. 하루의 일과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평일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개인 정비 시간이다. 오후 9시 30분부터는 청소 시간이고 아침과 저녁에 (혹은 점심에도) 인원점검이 실시되며 대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정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한다. 전자통신기기(핸드폰 1대, 노트북 혹은 태블릿 1대)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원들은 평균 8인(적게는 6인, 많게는 10인)이 1개 생활실에서 생활하며 복무관리관이 임명하는 생활실장과 대표 대원을 통해 공지사항 등을 전달받는다. 일반 외출은 규정에 대

³ 언론보도가 있긴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대체복무의 문제점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일과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 장을 첨부하였다.

⁴ 영월은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 영월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는 필자의 본가인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기준 3시간 이상 소요되며, 복무 중인 공주교도소 기준으로 4시간 이상 소요된다.

한 유권해석이 각 소마다 달라 1일, 일주일, 한 달 등 각소에서 정해 둔 기간 내에 “정원의 50% 내”에서 실시되며, 외박은 “정원의 20% 내”에서 “84시간 내”로 허용된다. 월급은 현역 육군 군인의 호봉 기간 비율에 맞춰 받기 때문에 복무기간 대비 인상 폭은 절반인 셈이다.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6개월~12개월 텀으로 각 업무지 순환 근무를 한다. 직원식당(직원 및 대체복무요원 급식), 세탁(수용자 의류, 직원 수건), 영치, 도서·신문(신문, 도서 분류 및 배부), 의료(의약품 분류, 수용자 자비의약품 배부 등), 구매(수용자 자비구매물품 배부), 시설관리(환경미화, 쓰레기 분리수거), 행정(생활관 관리, 복무관리관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각 소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 생활관 내에서 야간 상황근무도 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선번,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후번, 이렇게 두 명이 당직을 담당하고, 전체 대원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환경미화(구내청소) 업무가 폐지되고 각 소의 보안과 업무를 나눠 맡을 예정이며, 아직 시범운영 중인 하나 대체복무요원이 중앙통제실에서 당직을 서거나 소의 경계를 순찰하는 등 계호적 성격의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 개인의 하루 일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료 대원, 복무관리관을 비롯한 각 소의 대체복무 관리 담당자, 교도관들이다. 복무관리관은 각 소의 교도관 중 임명되며 3-4명이 대체복무팀에 소속되어 대체복무요원의 일상에 깊이 관여한다. 또한 대체복무팀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어 총무과장 역시 업무 관련자이며 대체역법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을 결정권자로 규정해두고 있어 교도소장 역시 큰 권한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일과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업무지의 교도관 역시 대체복무요원이 신경써야 하는 대상이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 오고 가며 마주치는 교도관들 역시 대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다.

3. 대체복무제도의 쟁점

필자의 경우 2021년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해 9월 인용 결정을 받았고, 반년 남짓한 기다

림 끝에⁵⁶ 2022년 5월에 소집되어 1년 6개월간 대체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 중에 있다. 같은 생활관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원들로부터 최근 “이제 군 복무를 시작하는 이들과 소집해제일이 같아졌다”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들곤 한다. 이런 말들은 복무 기간에 대한 불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들었던 ‘십자가 밟기’ 식의 질문들, 군인-수용자-경비교도대 어디 즈음에 취급되는 본인의 신분, 과도한 통제와 규율 속에서 ‘나’를 ‘조직’에 끼워 맞춰야 하는 순간,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받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조금씩 터져 나오곤 한다.

(1) 복무 기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설정되어 있는 기간은 과도할 만큼 길다.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도 대체복무의 기간이 과도하여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5년의 복무기간이 제출되는가 하면,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위한 국방부 공청회 자리에서도 36개월 안이 유일한 선택지로 제시되었다. 현역 군인의 복무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체복무가 예외이자 잔여로서, 병역기피를 차단하는 것이 마치 대체복무 제도의 근본 ‘목적’인 것처럼 논의되는 바람에 36개월은 ‘합리적인 안’인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이처럼 장기간의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⁷ 교정시설에서 함께 합숙 중인 대원들은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가 가혹하다고 여기는데, 사회와의 단절감과 소외감을 가장 자주 호소하곤 한다. “(기간 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1년 6개월이면 끝나는 수감 생활을 견디는 게 낫겠다”고 말하며 “여전히 병역거부가 ‘죄’로 인식되고 있는 건 아닌지” 토로하는 대원도 여럿 있었다. 필자는 이렇게 긴 기간이 병역거부자에게 2중의 족쇄로 작용한다고도 느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심사제도를 통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 이후로도 3년 동안 묵묵히 복무 생활을 이어가야 ‘진정한’ 병역거부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현행 대체복무제도에 담겨 있는 시혜적인 태도가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년 국방부장관에게 대체역법 제19조⁸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하라고 권고 내

⁵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국방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대체복무 기관이 추가되지 않으면 대체복무요원들은 복무를 하기까지 최대 4년의 대기기를 해야 한다.”

박웅진, “‘징벌적 대체복무 개선 필요’ 한목소리... 양심적 병역거부 60명 첫 소집해제, 『뉴스원』, 2023.10.25.

⁶ 함께 복무 중인 병역거부자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이후로도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라면 통상 2년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심사 과정도 긴 편인데, 합숙복무이다 보니 생활관을 지어야 하는 바람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30세 이하까지(군 면제는 35세)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데 필자의 경우 28살에 대체역 심사위원회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해에 29살이 되어 예외적으로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다.

⁷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Ⅲ-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142쪽, 2023.

⁸ 대체역법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

린 바 있으며, 3년의 시간이 경과된 현재 이 시점에서 복무기간의 축소는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1) 복무영역

복무영역은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대체역법 제정을 통해 병역거부자가 무조건 수형자가 되어야 하는 일은 면하게 되었고 이 점이 대체복무제도의 특기할 성과 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교정시설에서만 대체복무를 한다는 것은 병역거부자가 사실상 ‘제복 입은 재소자’⁹가 된 것은 아닌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불편한’ 실천을 감행하는 병역거부자를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는 영역에 재배치함으로써 병역거부자들의 평화적 신념이 알려지지 않고 공익에 이바지하는 모습이 차단되는 효과를 야기한다.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정시설이 군사화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보안’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일 만큼 힘을 갖는 공간이라는 점, 교정시설의 관계자들이 대체복무요원을 수용자-군인(혹은 지금은 폐지된 경비교도대¹⁰에 준해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하다는 점, 교도소장 등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반면 폐쇄적인 교정시설의 특성상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문제 발생 시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 점은 병무청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관리하고 병역거부자를 병역자원의 일부로 인식하는 등 대체복무제도가 군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과도 연결되며, 복무형태(합숙)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상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국가중요시설이며 이에 따라 유사시 ‘적’의 침범에 대비한 군사적 훈련이 종종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A교도소에서는 을지훈련 기간 대체복무 생활관 앞 공터에서 교도관들이 참여하는 군사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 “멸공”이 적힌 철모를 쓴 직원들이 배회하고, 대원들에게 안보의식을

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⁹ 정희완, “‘제복 입은 재소자’ ..대체복무입니까, 노역입니까”, 『경향신문』, 2022.8.30.

¹⁰ 경비교도대란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되었던 전환복무의 일종인데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 교정시설의 경비, 무장공비 침투에 대한 방어, 교정시설 내 폭동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육군훈련소에서 5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후 전국 각 교정시설로 배치되었다. 대체복무요원의 생활관의 경우 과거 경비교도대의 생활관을 수리, 보수하여 사용하는 곳들이 많다.

고취시키는 프로파간다 영상을 시청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육센터에서는 B교도소 소장이 모든 군대, 전쟁, 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노예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교육’하기도 하고, 복무관리관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 하나는 “너네(대체복무요원) 군대 온 것 아니냐”이다. 인원점검 시간에 교정마크가 보이게 침구류를 정리하라고 요구하거나 군인과 동일한 일과시간표가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등 각 대원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기보다 ‘각 맞춰진’ 통일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병역거부자들이 생활하는 대체복무 생활관의 시설물 중 하나에 ‘병영(兵營)도서관’이란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¹¹.

군사화된 관행에 문제제기하고, 반군사주의적 실천을 통해 군대와 폭력이 지양되는 사회를 요구하는 병역거부자가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고 실천한 결과로서 거꾸로 군사화된 규율을 강요하는 교정시설에 배치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병역거부자들은 ‘군인-되기’를 거부한 자신의 신념과 실천이 교정 시설 내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매 순간 유쾌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인한다.

물론 대체복무요원에게는 매달 1회 실시되는 인권진단과 분기별 1회 실시되는 복무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혹은 복무상의 불합리함을 개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있다. 하지만 많은 대원들은 그 조사지에 ‘사실대로’ 쓰는 것을 주저한다. 왜냐하면 계급직제하에서 ‘위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는 것에 익숙한 교정시설의 분위기상 공식적인 방법으로 ‘윗 사람’에게 문제제기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복무관의 언행이 자신에게 인권침해로 다가왔다고 작성하는 경우 혹은 자신이 소속된 교정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업무 관련자들은 ‘기분’이 상한다. 그들의 ‘기분 나쁨’에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다수 대원이 ‘불편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 보장되어 있는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을 폭 넓게 사용하여 불이익 조치가 가해진다¹². “(너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복무관리관)도 법대로 하겠다”가 기본적인 스탠스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적인 업무로 삼는다. 교정

¹¹ 그 밖에도 군대식 문화를 대원에게 강요하며 대원들이 ‘문제’로 인식했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침 점검 시간 때 구보(운동장 달리기 - 달리던 중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어 폐지했다고 함). 군인이 연병장에 모이듯 각 생활실별로 일렬 중대하여 1m 위에 선 복무관리관의 지시사항(‘훈화말씀’) 듣기. 저녁 취침 시간 시 화장실을 제외한 생활관 내 이동 금지. 매달 1회 진행되는 환경심사에서 대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는 서랍장 검사.

¹² 외출 외박 시간을 강도 높게 제한하거나, 그 이전까지는 대원에게 주말 휴식권을 보장했다면 두 조사 이후 주말 아침부터 대원을 모두 불러모아 교도소 내 환경미화를 시키거나, 불시점검을 시행해 벌점과 경위서 작성을 부과하는 등 다수의 불이익 조치 사례가 있어 왔다. 다른 결의 문제이지만 복무관이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전보 가는 당일에 당사자가 모르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시설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글에서 다룰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도관이 타인을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내리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위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권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에 반해 병역거부의 신념은 평화주의/비폭력과 연관된 페미니즘, 반차별, 비거니즘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병역거부자들은 토론과 합의, 인권에 대한 상호 존중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둔다. 교도관이 모두 인권침해의 가해자라거나 교정시설에서 행하는 업무가 전혀 공익적이지 않다고, 교정시설이 당장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무관심하고, 병역거부 운동의 맥락을 존중하지 않는 교정시설에서 병역거부가 대체복무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2-2) 복무형태

단체생활에 규율이 따르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10분 안에 샤워와 양치, 개인 물품 세탁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나 종사자나 직원에게 ‘대항’할 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수칙 등은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규모 시설에서는 흔히 ‘방장’ 제도를 운영하여 방장에게 ‘질서 유지’를 맡긴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입소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소자 대표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그 취지와 달리 방장은 시설 운영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되고 입소자들 사이의 위계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설비나 음식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정해진 일과에 따라야 하고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여전하다.¹³

장애인 거주 시설의 문제점을 묘사한 해당 글을 보고 대체복무 생활관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¹⁴. 대체역 복무관리규칙¹⁵은 결국 병역거부자가 거부했던 것 – 개별적인 자아를 가진 인격체가 아닌 ‘군기’가 잘 잡혀 있어야 하는 몸/집합적 덩어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규율 – 으로 다시금 회귀하게 만든다.¹⁶ 결국 대원들은 여기서 자신에게 부과되고 요구되는 것들이 군인과 유사한 것인지, 수형자처럼 대우받는 것인지

¹³ 나영정 등, 『시설사회 - 시설화된 장소, 저항하는 몸들』, 와온, 115쪽, 2020.

¹⁴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하고, 과도한 통제가 주어지며, 복무관이 선임한 대표 및 실장에 의해 일방적인 질서가 주어지고 위계가 생기며, 문제제기 할 시 불이익 조치를 당한다는 점(심한 경우 편입취소 될 수 있다는 점)..

¹⁵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은 외출·외박·휴가(제19조-제24조), 복장 지침(제26조-제28조), 복무위반 등 처리(제46조-제49조), 업무 수칙(제55조), 호칭 및 예절(제57조), 일과 시간(제59조), 아침·저녁·귀소·근무·불시 점검(제60조), 환경심사(제65조), 전자통신기기사용시간(제68조), 생활실장/대표대원 선임(제69조), 보호대원 지정(제71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군인과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규율에 아주 약간의 변형을 거쳐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앞서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이 일과시간표에는 취침 시간까지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시 복무수칙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방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생활실장과 대표대원을 복무관리관이 임명하고 이들을 통해 공지사항이 하달된다.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복무 생활관에서 직원 식당 이동 시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거나, 생활실 내 취식을 불허하는 등 복무관리관이 임의로 정하는 규칙도 상당하다. 2023년 교정본부에서 대체역 복무관리 정책을 새로 발표하며 외박의 정원 비율 변동 등이 있었으며, 2023년 10월 26일 정보통신기기완화 조치가 공문으로 내려왔으나 현재까지 복무관리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¹⁶ 이에 대해서도 군인 혹은 수형자로 대우받는 것에 대체복무요원들이 복무관리관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너네는 군대 생활 하는 것도 아니다”, “군대에 비해서 편하다”는 답변을 듣기 일쑤다.

(수형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인 교정시설의 문화 때문인 것인지, 이곳이 일종의 ‘시설’이라서 그런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협상해 나가야 한다.

복무형태는 이처럼 복무영역의 다양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대체복무제도가 비군사적인 민간 분야에서 공익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 설계의 첫 번째 요소로 고려되었는지 다시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시설과 합숙 형태는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¹⁷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논의의 우선순위가 뒤집혔다고 보여진다. 대체복무가 평화적 실천의 일환으로서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비군사적인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 사회복지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기관이 열릴 수 있고, 영역에 따라 합숙복무 여부를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합숙복무를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사는 데 필요한 ‘규칙’들이 구성원 간 토론과 합의로 일궈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하에 하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합숙복무 형태를 유지한다면 관리자-대원, 대원-대원 간의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장치를 고안해내야 하며, 군인/수용자와 유사한 수준의 규율을 강요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

(3) 기타 쟁점

병역거부가 시민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서,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¹⁸이라는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행해진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현행 대체복무는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와 맥락, 그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제도에 참여하고 제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병역거부의 동기와 구체적인 양심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그에 반해 대체복무제도는 “종교적 신념자”와 “개인적 신념자”로 양분하고 있을 뿐이다.

¹⁷ ‘대체복무 설계’ 이남우 “복무기간 등 완화 여지 있다”, 주간경향 제1493호, 2022. 9. 5.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208261529441

¹⁸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병역거부 캠페인 http://www.withoutwar.org/?page_id=10660

병역거부자의 신념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역법 제24조는 대체복무요원이 “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한다)에 가입한 경우”에 경고 1회와 더불어 복무기간 5일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병무청과 국방부 추천 위원들의 반인권적 질문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양심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치적 실천을 얼마나 일관되고 꾸준히 지켜왔는지 증명해야 했다면, 대체복무요원 신분이 된 후에는 그러한 정치성을 탈락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체복무 생활관 내에서 대체복무요원, 대체복무 업무 관련자 간에 흘러 나오는 인권침해적 발언들도 상당하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과 폭력을 옹호하는 언행 역시 즐비하게 이뤄진다¹⁹. 이에 반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지침²⁰이나, 예산 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원-대원 간, 대원-복무관 간의 반차별 조항은 대체역법과 시행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대체역 심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에 반해 대체복무 중에는 복무관리수칙 위반으로 경고 횟수가 누적되는 경우 ‘편입취소’될 위험이 존재한다. 편입취소 처분이 이뤄질 정도로 경고 횟수가 누적된 병역거부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금 '군대 아니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거부자도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일괄적으로 교정시설에서 3년간 합숙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도 대원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4. 나가며

과거 국가보안법을 다루는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를 다녀온 적이 있다²¹.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행해진 전시는 앞 공터에 놓여있는 12개의 문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시를 관람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에는 질문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폭력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평

¹⁹ 자세한 인권침해 언행에 대해서는 전쟁없는세상에 연재된 <대체복무 표류기> 참조 <http://www.withoutwar.org/?p=20821>

²⁰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63조 제1항 기관장은 대원의 각종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자살사고 예방 교육 2.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교육 3.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4. 안전사고예방교육 5. 정보보안교육 6. 반부패·청렴교육 7. 종교차별금지교육 8. 상급기관 지시공문 교육 9.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²¹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여성 서사로 본 국가보안법> 온라인 전시관 <https://dhrm.or.kr/online-exhibit>

화는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도 있었다. 총 12개의 질문은 국가를 향해 요구하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와 내가 맺고 있는 타인-공동체와 함께 묻고 답하도록 구성된 질문이었다고 기억한다. 한참을 질문이 적힌 문 앞을 서성였던 기억이 있다.

병역거부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불편함을 문제로 규정하고 그것을 바꿔 나가기 위해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 타인과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 그 질문들에 당장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근본적이고 거대해서 답을 미루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다.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체역 심사위에서는 신념을 매순간 실천했던 ‘나’를 무해하면서도 매끄럽게 서사화해서 위원들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흔들림은 필요치 않아 보였다. 그랬던 시간을 지나고, 1년 6개월간 대체복무요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는 다른 종류의 문제에 부딪혔다고 생각한다. 병역거부를 행하게 된 질문과 선택이 더 이상 유의미하게 여기지지 않는 공간에 놓여 있다는 당혹감. 질문을 해왔던 시간, 답을 구하고 새로운 질문을 이어가기 위한 관계가 갑작스럽게 단절된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제도의 문제를 감내하거나, 얼마 되지 않는 정치적 병역거부자들끼리 벽찬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막막함.

처음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대체복무제도를 병역거부자들이 쉽사리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대체복무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범하고, 때론 나와 같이 ‘나약한’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부터 나온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에서 ‘병역거부’를 손쉽게 택할 수 없는 제도라는 데 있다. 감옥에 가야하는 것에 비견하기 어렵지만, 현행 제도는 “감옥에 안 가게 해줬으니 된 것 아니냐”는 투에 가깝다. 거기에 더해 병역의 일종이며, 병무청과 국방부가 관여하고, 군사화된 공간인 교정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해야 한다. 수형자와 군인의 애매한 위치에 대체복무요원이 서 있다. 공익성과 민간성 대신 ‘군인과의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현행 제도가 오히려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데 큰 걸림돌로 서 있다. 결국 대체복무제도 역시 개인이 모든 것을 감내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 배치되든 여호와의 증인 회중이 있고, 3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종교적 믿음을 ‘증명’해냄으로써 종교공동체 내 성원권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그도 아니라면 유무형의 자원을 갖고 있고 지지 집단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병역거부자. 이런 유형의 병역거부자가 아니라면 대체복무제도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양심의 자유와 평화권을 소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

유만 보장하는 것에 가깝다.

대체복무제도가 군대와 전쟁을 거부한 이들이 사회 공동체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자 이행하는 제도여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징벌적이고 차별적인 형태로 운영될 이유가 없다. 이 제도가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적인 형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가치와 민주적 운영원리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병무청과 교정본부, 시민사회가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한 사이클이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서 제도의 변화가 곧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병역거부 운동에 참여해온 시민사회계와 대체복무요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